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12. 9.(수) 10:3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32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6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66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건 (2020-67-295)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호 방송정책기획과장

- 지금부터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안건 2쪽입니다. 의결주문은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책 재검토 계획에 따라 시청자 이익, 산업·기술·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5년 12월 「지상파 UHD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이 수립되었고, 2017년 5월과 7월에 수도권과 광역시 및 평창·강릉지역에서 지상파 UHD 본방송이 개시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지상파 UHD방송 정책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주셨고,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 추진단을 방통위와 KISDI·ETRI, 지상파방송 3사가 참여해서 같이 구성·운영한 바 있습니다. 5월부터는 지역방송과 가전사·통신사·EBS 의견을 수렴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정책방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정책방안은 2015년 지상파 UHD방송 도입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산업·기술·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서 6개 과제의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성과 및 한계 평가입니다. 그간의 성과를 보면 HD 이후 차세대 지상파방송 서비스로서 UHD방송을 도입하여 UHD 콘텐츠와 기술·서비스 공급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내 수도권·광역시·강릉·평창지역 UHD 방송망 구축으로 국내 전체 가구의

68.6%가 지상파 UHD 시청권에 진입했습니다. 16개 지상파방송사가 UHD 콘텐츠를 제작·유통하고 있으며 정부는 민간과 함께 콘텐츠 제작·인력양성, UHD 혁신서비스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계입니다. 2015년 계획 수립 이후 방송·통신 환경변화로 시·군 지역 UHD방송 도입이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고 의무편성비율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상파의 직접 수신율은 여전히 낮고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모델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 산업·기술·정책 여건 분석입니다. 지상파방송사의 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나 관련 기술·산업 여건은 개선 중입니다. 특히 올해 미국의 지상파 차세대방송 전환을 계기로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산업 측면입니다. 그간 진행된 UHD 인프라·콘텐츠 투자, TV 보급 등으로 UHD 전환 기대가 형성되었지만 지상파방송사의 경영상황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술적 측면입니다. UHD 콘텐츠는 HD 대비 제작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외주제작사의 UHD 전환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가 제작장비 가격은 지난 3년간 20~30% 하락했고, 향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책적 측면입니다. 관련규제 개선을 통해 무료보편 서비스 등 지상파방송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혁신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동향입니다. 미국은 올해부터 지상파 UHD방송 표준기술을 활용한 융·결합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위성파 케이블 등을 통해서 4K, 8K를 포함한 UHD 융·결합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입니다. 방송사는 매체환경 급변과 코로나19 등으로 지상파 재정난이 심화되고 UHD 설비와 관련된 기술·성능·가격 안정화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2021년에 예정된 시·군 지역 도입 일정을 최소 3년간 연기하고, UHD 콘텐츠 편성의무는 대폭 하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UHD 모바일과 부가서비스 등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규제개선과 UHD 콘텐츠 세제지원 등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가전사와 통신사들은 UHD 전국망 구축이 지연 중인 현 단계에서는 혁신서비스 등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사업의지, 구체적 추진 계획과 명확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전국망 구축 등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 추진단계에서 소비자의 요구가 있다면 상생협력을 위해 서비스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쪽 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시청자 이익과 방송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되, 관련 산업·기술·정책 여건과 전망을 감안해서 지상파 UHD 도입 일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UHD 콘텐츠 서비스와 방송 표준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혁신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셋째, UHD 콘텐츠 제작, 인력양성,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UHD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정비, 규제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UHD 전국 방송망 완성입니다. 수도권·광역시까지 구축된 지상파 UHD 방송망의 전국적인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상파 UHD 방송 전국도입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이미 인구대비 2/3 이상 방송망이 구축되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적극적인 지역격차 해소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UHD방송 표준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UHD 방송망을 기본 인프라로 우선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급변한 방송환경이나 지역방송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군 지역 망 구축 일정을 '15년 계획 대비 최대 2년을 순연하고자 합니다. 아래 <표>는 방송사별 UHD방송 망 구축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시·군 지역 UHD 방송망 구축 완료 이후에는 현재 HD 수준으로 UHD 방송수신율 향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UHD방송 시청자 접근성 향상입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거주 형태를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의 직접 수신환경을

개선하고, 방송사의 UHD 시청 준비사항 홍보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생산 또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UHD TV를 통해서도 지상파 UHD방송 시청이 가능하도록 범용 셋톱박스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료방송 가입자라도 지상파 UH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간 협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UHD 공급의 단계적 확대입니다. UHD 전국망 구축 일정과 연계하여 '20년~'22년까지 20%, '23년 25%, '24년 35%, '25년~'26년은 50%로 조정하겠습니다. 지역방송사는 UHD 콘텐츠 자체편성 상황을 고려하여 '23년부터 기준보다 5% 정도 하향할 계획입니다. 시청자의 질 높은 콘텐츠 향유권을 보장하고 방송사의 제작역량 강화로 글로벌 경쟁상황에 대응할 필요를 고려하여 콘텐츠 최소편성 의무는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과거 디지털 전환사례나 지상파 다채널방송 등 채널정책, UHD 장비와 성능·가격 안정화 추이, 외주제작사 전환현황, 방송사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과 비율을 조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27년 이후 편성비율은 향후 정책 재검토 시 콘텐츠 제작 여건과 현황, 전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네 번째, UHD 기술 기반 혁신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미 허가된 1개의 주채널 이외 공익적 목적 등의 부가채널 및 혁신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시범방송을 허용하고, 본방송 허가에 필요한 법령 개정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고정형 UHD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 내에서 이동형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방송을 허용하겠습니다. 고정형 UHD 수중계·모바일 특화채널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시청권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송·통신 융합기술 실증입니다. UHD방송 표준기술을 활용한 기술·서비스 실증 사업을 제주 북동권에서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제주 지역 시범서비스 이후 상용화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형서비스 수신 등 기술 실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K UHD 이후를 대비해서 8K UHD 영상 전송 기술개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UHD 법·제도 정비입니다. 방송법령 상 '부가채널' 개념을 정의하고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반영하여 주채널보다 완화된 규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유·광고·편성 등 지상파방송 비대칭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방송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UHD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서 콘텐츠 제작지원과 인력양성 지원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지역·중소방송 대상 UHD 콘텐츠 제작 지원을 신설하고, UHD 콘텐츠 제작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지역 UHD 콘텐츠의 신규 플랫폼 유통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깃광고 등 지상파 UHD 기반 혁신서비스의 수익 모델 개발을 위해 정책연구와 기술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방통위·과기정통부 부처 공동으로 이번 정책방안의 과제별 이행현황 등 UHD방송 추진현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UHD 방송망 구축, 시설 및 콘텐츠 투자 등의 의무는 재허가 심사 시 조건으로 부가할 계획입니다. UHD방송 전국망 구축 완료시점인 2023년까지 이번 정책방안의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이후 필요한 경우 정책방안의 조정·보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7쪽에 보면 지상파 UHD 콘텐츠 최소 편성비율을 '20년~'22년까지 20%, '23년은 25%로 되어

있는데, 20%를 가령 KBS가 편성한다면 제가 집에서 20%를 볼 수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나 하면 저는 안테나를 설치해서 KBS를 보지 않고 케이블TV를 봅니다. 케이블TV를 보는 시청자가 KBS가 20%의 UHD 콘텐츠를 송출하면 그 UHD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지금 현재는 볼 수 없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안테나를 설치해서 지상파방송을 보는 가구가 얼마나 되지요?

○ 장대호 방송정책기획과장

- 지금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 안테나를 통해 직접 보는 경우는 2.5% 정도로 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대부분 유료방송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UHD를 수신할 수 없는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지요?

○ 장대호 방송정책기획과장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제가 알기로 유료방송 가입도 하기 싫고 그 돈을 내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소득층들이 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UHD방송이라는 것이 2015년도 지상파에게 줄 때 말하자면 황금주파수라고 해서 통신사들이 굉장히 탐냈던 주파수를 방송사들이 매우 힘을 내서 이것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 방식대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지상파방송사들이 UHD 콘텐츠를 만들면 그것을 케이블이나 IPTV 또는 위성방송에 그냥 줍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돈을 받고...

○ 김효재 상임위원

- 돈을 내면 줍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CPS로 해서 돈을 받고...

○ 김효재 상임위원

- HD급을 줄 때 받는 돈에 비해 얼마나 더 받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UHD는 현재 유료방송 플랫폼에 송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송출이 안 되면 보편적 시청권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책에 근본적인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KBS든 MBC든 SBS든 UHD급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하겠다는 의욕은 좋은데 그것이 저에게,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전혀 도달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달되지 못한 구조가 무엇인지 그것을 풀어야 문제가 해결되지, 그 구조를 놓아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장대호 방송정책기획과장

-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유료방송과의 관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유료방송을 시청하기 때문에 재전송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어떻게 한다고요?

○ 장대호 방송정책기획과장

- 이번 계획에도 사업자 간 협의를 빨리해서 UHD를 유료방송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하자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동안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 장대호 방송정책기획과장

- 그동안 잘 안 되어서 이번 국감에서 지적이 많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접 수신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이 무료로 볼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해 UHD 같은 고품질의 방송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24시간 제공되는 전문화된 프로그램 볼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직수율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상파방송을 하나의 국가 인프라로 보고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서 활성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UHD 정책도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기본적으로 앞으로 텔레비전 시청의 행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처럼 유료 방송에 가입하는 행태가 바뀌어서 직접 수신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세계적으로 UHD 콘텐츠 제작은 다 이루어지고 있고, 넷플릭스나 글로벌 사업자들도 UHD로 제작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통위가 2015년에 UHD 정책을 수립하여 2017년부터 UHD 본방송이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유료방송 플랫폼에서도 자체 혹은 외국의 수급이나 UHD 콘텐츠나 전용채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지상파 UHD 콘텐츠가 정말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도달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현재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UHD방송 활성화 정책을 도입한 계기가 그런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UHD 콘텐츠를 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직접 수신하는 2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대다수 가구가 유료방송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상파 UHD를 도입한 취지가 지상파를 통해 지상파의 특성을 활용해서 UHD 콘텐츠를 하고, 거기에 단순히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Ultra-High-Definition) 고화질 콘텐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서 채택할 당시에 ASTC 3.0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UHD 콘텐츠 제작도 여러 가지 시장환경이나 지상파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역시 아직까지 UHD가 지상파로 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측면, 첫째 지상파를 통해 UHD는 계속 가야 한다, 지상파를 통하지 않으면 모바일 서비스나 다채널 서비스, 기타 새로운 혁신서비스는 유료방송 플랫폼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트랙(Two track)으로 하나는 최대한 지상파를 통해 하도록, 그리고 무료보편 서비스를 원하는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보급하게 하기 위해 수신환경 내용이나 기술 개발 내용도 이번에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보게 하기 위해서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사업자 간 그동안 HD 콘텐츠 재전송조차도 협의가 순조롭게 안 되어서 늘 법원에 가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UHD 콘텐츠 제작은 제작비용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대역을 만들어 내서 송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충분히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논의들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정부가 들어가서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가 이번 정책방안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지금 협상이 시작됐습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협상이지 않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사업자 간에는 물밑에서 일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정부가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결국 이용자들을 위해, 실제로 UHD TV는 가지고 있지만 UHD 콘텐츠를 누리지 못하는 시청자를 위해 어떤 망을 통해 지상파망은 지상파망대로, 그리고 유료방송망은 유료방송망대로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번 계기로 추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와 같이 이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결국 요점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 들기 때문에 지상파가 그렇지 않아도 광고 위축 때문에

투자여력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어렵게 만든 콘텐츠조차도 시청자들은 지상파에서 보내는지 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2가지 상황을 풀 수 있는 정책방안입니다. 보니까 중간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사업자간 협의를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2015년도에 UHD를 도입하고 2017년도에 최초 방송하고 나서 뭔가 정책적으로 UHD를 도입했으니까 직수율을 높이고 여기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전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책을 정부가 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 전체적으로 방송정책 전반이 전송 부분은 유료방송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면서 UHD 활성화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대부분 공동주택인데 공청안테나를 설치하고 지상파방송을 직접 봤습니다. 아파트 내에서는 유선으로 들어오고 지상파로 수신하는 것만 해도 되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보다 직수신 환경이 훨씬 높아지고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부분만 정리되더라도 현재 2.5%인 직수율을 상당 부분 높일 수 있고, 이른바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청자들의 후생과 복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UHD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UHD 전송 기술에 따라 신규 서비스들이 다채널 방송, 이동형 서비스, 융합기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방송도 UHD로 하자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항간에 나오는 것처럼 직접 보지도 못하는데 왜 이 정책을 끌고 가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방향에도 맞지 않고 과거 우리가 추진해 왔던 전체적인 정책방안과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려움은 있지만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협의해서 마련하자는 것이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위원장님 말씀을 조금 이어서 보면 직수율이 낮아서 지금도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신축 공동주택이나 기존 공동주택을 공통으로 이렇게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UHD 콘텐츠 공급 단계적 확대를 보면 연도별로 방송사 입장과 우리 입장이 조금 다르게 조정해서 퍼센티지까지 냈는데 방송사들이 이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수용 가능하다고 서로 소통이 잘 된 수치입니까?

○ 한상혁 위원장

- 전 세계적으로 초고화질 방송을 실제로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UHD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서비스를 하는 나라들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도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초고화질 콘텐츠를 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UHD 기술 자체가 향후 방송 전송 기술의 핵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활성화 방안을 만든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결국 우리가 기술표준을 선도하면 기술표준을 나중에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하튼 유료방송과 콘텐츠 제작사들 간 협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최성호 사무처장

- 위원님, 말씀대로 유료방송 협상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상파 방송만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2.6%지만 실제 유료방송을 가입하고, 동시에 지상파방송을 안테나로 수신하는 가구도 12.2%입니다. UHD 콘텐츠가 좋다면 유료방송을 보면서도 안테나를 달아서 지상파 UHD 방송 수신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상파방송을 수신하는 가구가 꼭 저소득층이라서 유료방송을 보지 않는 사례도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때문에 굳이 유료방송을 가입하지 않고서도 UHD TV로 영상을 원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UHD 콘텐츠가 좋다면 유료방송을 끊고 대신 지상파방송만 보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요가 더 콘텐츠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좋다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유료방송 협상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여러 문제도 많고 또 현실 여건을 고려하는 정책이 있어야겠지만 역시 UHD 활성화는 바른 방향이고, 또 미래로 가는 옳은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화상도가 높은 TV채널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역시 미래를 본다면 UHD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서비스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왔지만 혁신서비스를 위한 법적·제도적 규제 완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제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목표를 보면 2021년부터 완화된 규제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꾸어야 할 법 규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현재 방송법은 1개 채널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부가채널 내지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그밖에 UHD 콘텐츠 제작이나 추가로 드는 비용들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라도 광고나 편성규제들도 재검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상당히 많은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지상파방송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외주사 제작비율이 굉장히 높고 앞으로 높아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결국 외주사가 문제입니다. 외주사에서는 제작비가 비싸고, 또 콘텐츠 제작환경도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에 대한 지원과 독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지상파만 우리가 계속 몰아붙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상파에게 외주제작비율을 의무화 해 놓고 외주사는 제작을 못하고 있는 이런 언밸런스한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등 외국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미 4K UHD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콘텐츠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UHD 콘텐츠는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이런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이 시장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상파사업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UHD 부분은 지상파사업자와 정부의 문제를 넘어서 콘텐츠 그리고 OTT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들과 다각적인 협의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방안이 일단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사무처에서 말하는 방안이 이런 현실을 고려한 현재로서는 가장 최적의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일부 지상파방송사에서는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겠지만 일단 현실에 맞춘 정책 조정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무처 안에 동의합니다.

○ **장대호 방송정책기획과장**

- 김창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수율을 높이기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 안테나 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 필요한 안테나 설치자금을 지원하는 계획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따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시청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이미 고시가 나가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공시청 설비를 위한 재정 지원이나 기술 지원도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대호 방송정책기획과장**

- 또 하나는 사업자들과 협의를 말씀하셨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사업자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2년 하는 방안에 대해 사업자들 의견을 다시 수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5년에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2년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고 설득했고, 일단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도 그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지금 계획에 따라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 도입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고, 유예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계획대로 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이것이 또 안 되어서 나중에 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에 가까울 정도로 그동안 방통위와 사업자가 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김 현 부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나치게 표현한다면 현실은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다면 다시 재정비해서 현실에 맞게 전진하기 위해 우선 방송사업자들은 3년을 유예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시청자들의 지역 간 격차를 생각해서 일단 2년 정도 하고, 편성비율도 여러 가지 혁신서비스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해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출발하자는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방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 문제나 지역 차별 해소 등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데, 특히 방송분야는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악화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이야기가 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복지를 통한 격차 해소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MS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국민이나 시청자 입장에서 시청 가능한 채널이 증가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각국이 발전하고 있는 방향에 발맞추어서 그동안 계획대로 안 된 점도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방통위 역할을 강화해서 시장에서나 아니면 지상파와 또 다른 관계자들 간 이견들을 잘 조정해서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MMS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절차적인 문제나 내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종합하면 지상파 방송 중 특히 공영 방송은 정확한 사실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면서도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 흐름을 보더라도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는 현재 시점을 잘 반영해서 지상파 UHD 활성화 정책방안이 국민에게 보다 사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을 다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창룡 위원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김창룡 상임위원

-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것이 오래 걸렸습니다. 작년에 일부 유예하고 발전방안을 새롭게 수립하겠다고 하고 또 상당한 기간이 걸렸는데 그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하셨지만 지상파방송사의 재정적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UHD방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초고화질 TV뿐만 아니고 새로운 혁신서비스들이 계속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뒤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논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UHD 방안을 만들어 놓고 직수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마련하지 않고 추진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상 현재 이런 직수율이 2.5%밖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누리는 미디어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조금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의미가 있었던 것은 과기정통부와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합의된 안을 만들어냈고, 같이 하기 때문에 추진동력도 더 생기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 이행 과정에서도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미흡하지만 전체적으로 발전방안을 담고 있는 내용이니 이 부분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혹시 한 해가 다 가는데 경기방송 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한상혁 위원장

- 그 부분은 따로 논의하시지요.

○ 김창룡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차기 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2분 폐회 】